

2011년 이주 인권연대 한·독 심포지엄 참가기

최영숙*

1. 독일 거주 한국인 3세대의 동행

2011년 11월 3일~8일 대전에서 한국의 이주 인권 연대가 주최한 “한국과 독일 이주민의 삶, 정책, 그리고 운동”이라는 주제의 한독 심포지엄과 관련 단체들을 방문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코레아협의회(Korea Verband)의 한정화, 신호은, 코레엔테이션(Koreantation)에서는 수미, 레베카, 로트, 한민족연대에서는 본인이 참가했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이주민 1세, 1·5세, 2세가 동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심포지엄이 개최되기 전인 2007년 한민족유럽연대와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가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0명의 유럽연대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인의 독일 사례” 포럼에도 참가하여 주제를 발표하였다. 그 후 2010년 후속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이주활동가들이 독일을 방문하여 금속노조 국제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가졌다. 이주 활동가들은 독일의 5개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강연을 하고 관련단체들을 만났다. 이주민 역사가 100년이 넘는 독일의 이주정책 및 제도들과 독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현장경험, 독일사회의 이주민의 삶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었다. 2011년의 심포지엄 역시 그 후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 된 것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문제를 다루던 것에서 더 폭을 넓혀 재외동포 정책과 이주아

* 현 6.15 유럽지역 공동위원회 공동대표, 한민족 유럽연대 위원장, ysrippel@gmx.de

동문제 등을 다루어 이주운동의 발전을 엿볼 수가 있었다.

2. 한국사회의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주제 발표 내용 중 세션 1의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 과제”(곽재석, 이주동포 정책연구소)에 의하면 한국 거주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비자(F4), 영주권 비자(F5)로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구소련 연방에서 이주해 왔다. 한국 정부는 동포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국내취업조건을 자유화하여 동포사회를 포용함으로써 한민족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 취업정책이라고 공표하였으나, 방문취업동포의 급격한 증대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경제 침체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양상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포 취업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과거 동포 포용정책차원에서 추진된 방문취업제의 취지가 탈색되었다고 했다.

또한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재외동포정책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중국동포 문제를 외국인력 프레임 속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해외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현황과 이들의 사회통합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근거하에 현행 재외 동포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재외 동포법의 제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인 “한국의 이주아동의 현실(석원정,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는 한국 이주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이주 아동들이 어떤 조건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주 아동에게 필요한 국가적·사회적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했다. 이주민 규모가 12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성인들의 이주와 함께 아동들의 이주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이전까지 한국의 이주아동 정책은 방관과 묵인의 상태였다고 비판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 할 수가 없다. 부부와 부모가 상대 파트너 또는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 할 수 없게 되자,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 영뚱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한 후 미등록인이 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과 혼인함으로써 출생한 2세를 다문화 가정 자녀라 하고 이들은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주로 어머니가 재혼하고 그를 따라 입국한 아동을 중도입국아동이라고 한다. 중도 입국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 새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어 한국인 아동으로 살아가다가 부모들이 별거하거나, 이혼하면 파양되어 귀국하거나 미등록아동으로 살아간다. 이주아동들은 부모의 바쁜 생활, 한국어, 한국물정의 미숙함, 경제적 문제, 교육문화의 차이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기반을 둔 이주아동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발제인 “단기 순환 이주노동자 정책과 이주민의 권리(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1991년부터 인력부족을 겪고 있던 한국의 중소기업에 연수생으로 도입되었고, 이들은 극단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업재해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신분증 압류, 감금, 폭행의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였다.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견디지 못한 연수생들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자가 되었고, 고용허가제에 앞선 2003년에는 미등록 노동자 비율이 80%를 넘어 섰고 이는 한국 정부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허가제 도입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했다. 2003년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값싼 인력을 우선시한 정부와 고용주,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안정적인 체류, 노동조건 향상을 원했던 이주노동자와 지원 단체 간의 갈등과 힘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였다고 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정주로 인한 한국의 사회적 부담을 피하고 고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목적하에 엄격한 단기로테이션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신으로 최장 5년 이내 단기 취업만이 허용된다고 했다. 결국 한국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는데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차별을 법적으로 명문화 했고,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노동을 강요받게 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가족동반과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 로테이션 제도는 비현실적이다.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을 억지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뿐 아니라 실제로는 장기간 살고 있는데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낳는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20년이 넘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도 함께 살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함께 살 권리가 없어 태어나자마자 미등록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 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 당사자와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저항이 없이는 개선되지 않으므로 단기 로테이션 제도의 폐지를 향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영국, 독일 이주민의 삶, 정책, 그리고 운동

첫 번째 발제인 “최근 영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도전받고 있는 영국 이주민들의 권리(신효은, 스코틀랜드 이주민 연구센터)”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토리당이라고 불리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합정부가 2010년 정권을 잡았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 찾기, 난민신청자 보호 등을 내세운 선거 공약과는 달리,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이주민을 수십만에서 수만으로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영국정부는 노동관련 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유럽연합 이주민들의 대다수에게 영국에 정착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했으며, ‘가사노동자들을 영국인으로 대체하는 정책, 위장 결혼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비유럽 연합국가의 결혼 파트너들에게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제도, 연소득 2만 파운드 이상의 이주민들이 가족을 불러 올 수 있다’와 같은 강경책을 내놓아 이주민들이 영국사회에 영주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또한 발제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들이 영국에 들어와 영국 노동시장에 있는 간극을 메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필요 없게 되면 지체 없이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모든 비인권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이주민 및 난민 공동체 조직들, 이주관련 NGO 단체들이 정부 정책들에 대항하여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한국 남성 2세 정체성 찾기 전략(한정화, 독일 코리아 협의회)”에서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들을 인터뷰하였는데 그들의 부모는 광부 또는 간호사로 1960년대에 독일에 온 경우였다. 발제에 의하면 구슬자들은 어릴 때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인식 못했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친구들로부터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본인들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되묻게 된다. 그들에게는 부모의 고향인 한국은 낯선 곳일 뿐이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어학코스를 하면서 제2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외모는 같지만 자신이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언어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하게 된다고 한다. 발표된 사례의 중 한 사람은 코즈모폴리탄이라고 자칭하고, 두 사람은 독일시민이라고 자칭한다. 부모들은 미숙한 언어 실력 때문에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유창한 언어력으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체성이 확고해진 후에 독일에 왔던 부모세대가 더욱 잘 적응하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미디어에 비친 이주민(레베카 수미, 코리엔테이션)”에서 발제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독일의 단체인 코리엔테이션을 소개했다. 이 조직은 2008년에 결성되었고 당시에는 한국계 2세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아시아 출신들이 함께 하고 있다. 구성원의 직업은 학자, 영화감독, 문화매니저, 변

호사, 예술가, 기자 등 다양하다. 이들은 이주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독일사회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간 신문 “코포신문”의 독일어 란에 기사를 제공하고, 엘로프레스라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독일 미디어에 비친 이주민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독일의 라이너 가이슬러 교수에 의하면 이주민에 대한 독일 미디어보도의 부정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 할 수가 있는데, “제1측면에서는 이주민은 독일의 국가 세금을 축낸다. 제2측면에서는 이주민은 문제 집단이다. 제3측면에서는 이주민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보도에서 부정적인 보도는 훨씬 강하며, 반면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보도에서 이들은 모범적인 인종으로 표현되어 다른 이주민 그룹과 대조적인 방식으로 기술된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주민은 대체로 “타자” 혹은 “주변그룹”으로 표현되고 독일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구성원 집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발제자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독일 언론인 결합단체인 “새로운 독일 언론인”을 소개했다. 이 단체의 목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다원화를 독일과 유럽 이주사회의 미디어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2007년과 달리 이주민 관련 한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이주민 출신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하여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주민들의 인권 운동에 관여하는 한국 NGO 그룹들이 많아 부러운 느낌이 들었다.

4. 한국 이주민 운동단체를 돌아보다

후속 프로그램인 “한국이주민 운동의 이해”에 따라 처음 방문한 한국의 단체는 조합원이 약 400명이고 2005년에 결성된 <이주노동조합(Migrants Trade Union: MTU)>이었다. 심포지엄에도 참가했던 미셸 카투이라(필리

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이 취업국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들을 강제단속, 추방시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본인도 ‘허위취업’이라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이주민들이 내국 노동력을 빼앗는다는 한국노조 조합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한국 노동조합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민주노총 산하에 이주민 지부가 있어 이주민이 그 조직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고 했다. 독일에는 이주민 노동조합이 없다. 1960년대에 독일에 온 광부, 간호사들은 원하면 금방 독일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었다. “한국노조에서 이주민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처음부터 함께 투쟁했다면 이주민 노동조합이 필요 했을까?”라는 의문이 내 마음 속에 일어났다.

다음으로는 서울 무학재 역 부근에 있는 <조선족 연합회>를 방문했다. 연합회는 2000년에 결성되었으며, 동포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선족은 동포다”라는 청원운동과 미등록자 사면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요사업은 처음 온 중국동포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동포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수 있는 “신용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던 고국에 와서 같은 동족에게서 차별을 받는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괜히 짠한 감정이 들었다.

다음날인 11월 5일에는 <국경 없는 마을>로 향했다. 안산 국경 없는 마을은 2007년 한민족 유럽연대와 인권연대가 공동 심포지엄을 할 때 방문했던 곳이다. 당시에는 외국글자로 간판들이 나부꼈고, 보행자도 외국인이 많아,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 온 느낌을 받았다. 지금은 많이 변해 있었다. <국경없는 마을>이 알려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자 정부가 집들을 새로 단장했는데, 간판을 대부분이 한국말로 교체했다. 그런데 문득 “새로 오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읽을까?” 하고 의아해졌다. “최소한 두 가지 언어로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많은 이주민들은 방세가 비싸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1994년

부터 만들어져 굳건히 안산을 지키면서 이주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안산이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다. 최근에는 안산재 병원과 이주민 센터가 협약을 하여 이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대표인 박천웅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사 주시고, 최근에 출간한 그의 저서 “다문화 교육의 탄생”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파비에-버마 어린이 교육 NGO 후원의 밤>에 참여했다. 파비에에는 버마에서 평화와 행복과 안녕을 상징하는 나무이름이라고 한다. 버마 사람들은 파비에 나뭇잎을 특별하게 여겨 “파비에 꽃”이라고 부르며 크고 작은 일이나 행사에서 파비에 나무 가지를 잡고 기원을 드린다고 한다. 설명에 의하면 2010년 10월 서울 하자센터에서 교육 NGO단체인 파비에(THA BYAE)가 발족했다. 버마 어린이를 위해 도서관과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2010년 한국이주활동가 연수차 독일 방문 프로그램에도 참석 했던 마웅저 대표는 1994년 버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버마의 민주화와 어린이 교육활동을 해 왔으며, 2008년에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버마와 태국 국경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돕는 이 후원의 밤에는 많은 버마 자매결연 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독일 팀을 대표하여 본인이 유럽연대 대표로서 축사를 하였다.

11월 6일에는 부산에 도착하여 305일째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35미터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부산민주노총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로 가서 핸드폰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연대 인사를 했다. 동참했던 독일 2세들에게 그녀의 농성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방문 4일 뒤인 11월 10일에 김진숙 지도위원은 해고 철회 합의를 이루어 내고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한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 것이다. 감격적이었다.

저녁에는 1996년에 설립된 <이주민과 함께> 단체를 방문했다. 이 단체는 독일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대표인 정귀순 님을 통해 유럽연대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2010년에는 한국의 이주활동가들이 독일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 단체를 통해 독일에 있는 1세 이주민들은 한

국의 이주활동가들과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이 독일에 살고 있는 선배들을 생각하는 정은 남달라서 우리는 많이 감격했다. 독일 재단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이주민과 함께>를 지원하고 있다. 부설 기관으로는 다문화 가족센터인 <어울림>, 이주민 정책 만들기 부서인 <이주와 인권 연구소>, 아시아의 희망 가꾸기인 <아시아 평화인권 연대>가 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이주민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여 그들이 자국민들을 상담하고, 자국어로 간행물을 만들어 내는 등 다른 관련 단체들에게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11월 7일에는 이주아동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 학교>를 방문했다. 2006년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놀 수가 있는 열린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했다. 학생 수는 총 54명이며, 7명의 상근 교사와 3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을 정규교사들이 담당하고 그 외 교수, 변호사 등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다. 수업 과정의 운영체제는 이주아동, 청소년을 위한 디딤반과 정규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한다. 예체능 교과는 한 학생이 한 악기를 배우도록 노력하고, 이 외에도 생태 교육학, 동아리 활동 등이 있다. 학교 뒤쪽에 있는 채소밭은 아이들 수업용이라고 한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는 2011년 3월 1일 위탁형 대안 학교(초·중·고)로 인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양산 다문화 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정부로부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활동을 위탁 받은 NGO 단체이다. 운영비는 정부가 지불한다. 까다로운 보고서를 쓰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약 700명의 결혼 이민자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상담실 운영, 취·창업 지원, 한식반찬 요리교실, 가족교육, 이중언어 다문화 인권교육 등이 있으며, 사업의 핵심은 ‘찾아가는 방문 교육’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두 번씩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 한국어 교육과 아동교육을 실시한다. 한 가정당 5개월의 방문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전공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 인력 27

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상담 프로그램에는 한국인 남편들의 상담도 포함된다고 했다. 주최 측에서는 우리들에게 방문 프로그램이 너무 뻑뻑한 점을 고려하여 사찰 방문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2세대이나, 나에게도 해외에서 접할 기회가 없는 사찰 방문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제안이었다. 특히 한국의 3보 사찰인 양산 통도사라니! 우리가 방문한 11월 초순에는 통도사 뒤의 영취산과 통도사 주위에 단풍이 아담하고 곱게 물들어 있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웅전에 불상이 없고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금강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방문 프로그램을 마쳤다.

5. 방문을 마치고

한국의 이주 관련 단체들은 양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다.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은 제도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주민 인권과 삶을 향상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없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이주 관련 NGO 단체들이 많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이주민의 역사가 짧고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해왔던 한국인들이 갖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한·독 심포지엄과 후속프로그램은 우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었다. 나의 바람은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2세대들이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이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그리고 한국 이주 관련 단체들과 연대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2011년 이주 인권연대 한·독 심포지엄 참가기 저자 소개

성명: 최영숙(Choi, Young Sook)

- 1966 대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서울 전 수도의과대학 부속 병원 근무
- 1966-1981 독일 여러 병원에서 근무
- 1978 재독 한국여성모임 창립회원, 재독 한국여성모임 총무
- 1987-2003 독일 녹색당 당원
- 1989-현재 독일재단[Umverteilen für eine solidarische Welt] “연대하는 사회를 위한 분배”
여성 분과위원회 활동
- 1987-1991 전 재유럽 민족민주운동 협의회(약칭 민협) 국제부 등 활동
- 1992 전 재유럽 민족민주운동 협의회(약칭 민협) 대표
- 1990-1995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약칭 범민련) 국제부, 문화부 활동
- 1994-2004 재독 한인 2세 문화패 “천둥소리” 매니저
- 1998-2006 한독 문화 협회(약칭 KDK) 회장
- 2001-2003 한민족 유럽연대(약칭 유럽연대) 교육, 문화 연대 책임
- 2003-2004 한민족 유럽연대 부위원장
- 2002-2006 재독 한인 2세 사물놀이패 “신명” 매니저
- 2003-현재 독일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회원
- 2004-현재 6.15 유럽지역 공동위 운영위원
- 2007-2010 코리아 협의회 부위원장
- 2010-현재 6.15 유럽지역 공동위원회 공동대표
- 2010-현재 한민족 유럽연대 위원장